

국가 전략 정책 산업

2007. 11

김상수

[www.kimsangsoo.com](http://www.kimsangsoo.com)

---

국가 전략 정책 산업

1. 창조산업
2. 지역학의 진흥을 통한 지역 발전
3. 국가 재생 에너지 산업
4. 국가 환경 산업
5. 한·중·일 문화, 역사, 예술 텔레비전 방송위원회 출범 (EABS- T.V)
6. VISION 새만금

---

국가기운(國家氣運)을 일으키는  
일대 전환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1. 창조 산업

무엇이 과연 오늘의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원천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영역이  
高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과 선택  
으로,  
문화예술산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으로



자, 문제를 똑바로 보자.

오늘의 한국현실에서 대다수 일반 시민들이 매일 매일의 삶의 일상에서, 정치의 공간에서,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마찰과 부조화, 폭력적 혼돈은 우리들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의 무능력은 냉소주의와 정치적 무관심을 낳아, 도리어 지키고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가치까지 폄하하고 훼손하게 한다.

경제생활의 파행과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인간적 황폐화는 한국사회를 일대 파탄의 지경으로 내몰고 있음을 냉정하게 살필 수 있어야만 한다.

지금의 경제현실이 초래하는 사회해체 현상은 더 할 수없이 파괴적이다. 강력범죄의 급증과 끔찍한 살인, 가족동반자살이라는 비극적 행태를 포함하는 자살율의 급증, 세계 최고수준의 이혼율과 거꾸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등의 지표들은 사회해체의 급격함과 그 심각함의 일단을 드러낸다.

생존의 현실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값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라면 사회의 존립은 너무나 비극적이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사회를 근본에서 받치고 있는 정신적 위기이고, 문화적 위기가 더 본질적이다.**

문화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존재의 사회적 의미나 삶의 의미를 문제 삼는 태도다. 이 태도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의 목적이나 가치를 향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그 목적들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여하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이다.

정신의 위기, 문화의 위기에서  
진실로 정신을 찾는다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찾지 않는다면, 세우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교육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법질서의  
정의로움과 사회적 조건에 대해 질문하는  
문화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정신과 문화의 위기는**  
전쟁이나 가난의 공포에  
대한 기억만큼이나  
위태로운 것이다.  
이 위기는  
경제에 대한  
과잉된 이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 창조적 한국을 새롭게 세우는 근간(根幹)으로 우리는 ‘문화의 힘’을 그 核(核)으로 두 가지 구체적 현실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갈갈이 찢겨진 분열과 정신, 가치관의 위기현실을 돌파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문화의 발전**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운다.

지난 20년간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과 내용은 조악하고  
국민 일반의 삶의 만족도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현실을 직시(直視),  
계층 간, 세대 간, 소통의 부재와 불확실은 물론이고 삶의 몰가치와 반정체성은  
우리사회 가치관 혼돈과 혼란을 맞고 있는 사회위기의 첨예한 현실

자유로운 실험정신으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고 사적 이익을 넘어선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공성은 실종되고 나온 내일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적 노력은 미미하  
다.

여기에 문화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가치와 조건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근거로 작  
동한다.

둘째,

무엇이 과연 오늘의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원천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영역이  
 高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과 선택으로,  
 문화예술산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으로 인식,  
 창조산업을 기치(旗幟)로 앞으로 5년간 새로운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는 실  
 질적 견인책(牽引策)으로, 문화예술산업을 미래를 결정하는 '창조산업'으로 획기적  
 으로 전환, 고용과 국부를 창출시킨다.

문화예술을 좁고 얇은 商業的 시야에서, 국부 창출의 產業的 시야로 인식할 것이 요청  
 된다.

왜? 많은 선진국들이 미래의 국가 경제운명을 독창적인 창의성, 또는 창조성에 두고  
 있을까?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소위 '정보혁명'을 통해 정보사회로 이행했다. 그렇다면 정보사  
 회 이후에 올 사회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은 무엇인가?

세계 선진 국가들은 창조적 지식과 창의성을 현실 발전 근거로 인식하는 시대

21세기 특징인 지식기반 창의성 경제란 지식과 창의성이 경제발전의 근원 동력이자  
 내생변수(内生變數)로 숙련과 암기로 얻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닌, 혁신(革新)과 창발  
 적사고(創發的思考)만이 문제를 푸는 단서

이는 창의성 또는 창조성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지금 절대가치로 얘기하는 경제발전,  
 더하여 사회 총체적 생산능력의 근본을 일으키는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

**창의성, 창조성이 곧 사회와 경제발전의 동력 엔진이다.**

영국의 경우, 1997년 문화'를 적극적 산업으로 재정의, 창조산업으로 제2의 산업혁명 주도. 토니블레어 수상의 지휘로 1997년 이후 창의산업(문화산업)에 힘을 쏟으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 발전을 거두고 있다. 창의산업은 2005년 현재 GDP의 9%인 1100억 파운드(약 230조원)로, 140억 파운드(35조원)의 출판, 음악 등 문화관련 산업을 해외에 수출, 전체 고용인구의 8%인 220만 명이 종사, 무한한 잠재력

미국의 경우 엔터테인먼트산업(문화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발전, 전체 수출액 중 1위  
2003년, 창의미국, 'Creative America' 발표,  
국민의 창조적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기획서 발표

우리사회에서도 김영삼, 김대중 시대부터 지식이나 창의성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지만 경제 시야(視野)가 당장의 실물경제에만 집착,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과거 노동 집약형 경제개발시대의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지식과 창의적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를 계속해서 실기(失機).

창의성은 비단 예술이나 과학의 전유(專有)가 아닌, 모든 삶의 영역, 특히 경제의 영역에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식의, 창의성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한다.

더하여, 성장이든 시장효율성이든 경제발전이란, 인간의 가치와 사회가치의 합목적적(合目的的)인 관계와 가치가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경제적 가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문화적 품격(品格)을 지닌 시민(市民)들 삶의 구현이며  
삶을 더 풍요하게 하는 문화적 가치 이바지는 사회와 국가의 중요 역할이다.

**현실 문제의 인식-**

여기서 우리는,  
창조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창조산업의 뿌리인  
상상력과 창의성을 담보하는 예술 문화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은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이자 DNA  
예술은 심미적 잠재력에 호응하며 인간과 인간의 대화체  
예술은 고립된 개인주의를 넘어 상호 이해의 토대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예술의 개방성과 자율성은 바람직한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자극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예술에 대한 가치인식이 너무나 미약한 실정  
예술의 위기 현실, 예술 현장에 계속되는 위기의식의 정체는,  
시와 아름다운 음악과 연극과 색채가 없는 콘크리트 개발현실

기초 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작가들,  
문학인, 연극인 등 이들은 창작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예술가들의 생업인 예술만으로는 생계는커녕 도저히 생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현실,

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있는 경우에도  
예술 종사 인구 65%가 창작관련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문화  
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3년)

**이래서야 어떻게**

**21세기 창의의 시대를 준비하고 '창조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가.**

기초예술의 위기는 곧,

기초과학이 탄탄하지 못하면 첨단과학이 제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우리 사회 예술의 문제는 비단 예술가의 생계가 아닌,  
우리사회 예술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이다.

국가가 예술가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사회 예술 위기의 심각성은  
예술이 작동할 수 있는 경제적 생태계 자체가 위기이다.

창의성과 창작 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무지(無知)가 더 근본적인 문제.  
‘예술이 밥 먹여 주냐?’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하는 냉소처럼  
사회적 위기이자 민주주의 공동체 위기를 자초했다.

‘예술이 사는 데 왜 필요하지? 투자할 게 더 급한 게 많은데’ 식의 경제 인식이나  
정부 정책 전문가들의 얕은 생각이,  
오늘의 비문화적 근대산업 구조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황폐지경을 만들었다.  
국민소득 500달러였던 30년 전보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인 오늘날이  
더 예술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 생활의 기이한 현실.

대중문화 일부 종사자와 미술 음악의 극히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술 문화계의 빈부의 양극화는 극단적이다.

주 5일 근무의 여가시간이 늘었지만, 일부 영화 등 대중상업문화와 유흥문화만 창궐,  
세계최고의 술 소비량, 무차별한 향락문화  
오직 얕은 돈벌이만의 대중상업문화의 발흥이 문화의 전부일 수는 없음.  
연극 문학 현대미술 등 기초예술 문화 분야는 황무지

‘문화예술이 돈이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가 삶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중차대한 인식을 토대로,  
기초예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예술의 위기는 예술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창의성과 직결되는 공공적인 영역의 문제임.

오늘 날 일부 대중문화의 발흥과 한류현상의 연원을 제대로 보아야 함.  
창의성의 원천이 고갈된다면 대중문화는 문화산업이 아니라,  
저급한 저질의 얕은 돈벌이 위주의 상업문화로 계속 전략하는 현상이 지속.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예술의 발전을 의식하는 정책을 나름대로 펴왔지만, 예술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마련도 미비한 현실, 현 정부에서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술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뭔가?

우선 국가나 정부가 예술 문화의 국가적 중요성, 산업성, 경제성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고, 세계의 변화에 둔감했으며, 국가나 정부가 무엇을 지금 즉시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안목과 비전, 정책 목표가 없었기 때문. 따라서 예술의 중요성을 국민 일반에게 설득시키지도 못했음.

그간의 예술 정책은 예술계 일부의 불만에 간헐적 응급적 처방으로 대응, 예술정책의 종합적인 비전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이 없었음, 무분별 나열식 사업들, 이는 사업에 따라서 정부가 정말 지원해야 할 사업인가,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것인가, 사회가 계속해서 변하고, 예술의 표현방식도 변화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새로운 정책 수요는 무엇이며,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기왕의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정책과 비전의 눈으로 살피는 안목이 거의 없었기 때문.

이제 세계 각국은 창의성과 상상력이 국가 경제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시작- 경제가 제일의 문제이자 시급한 문제 해결인 우리 사회일수록, 정작 문화와 예술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 예술의 창출이 요청되는 사회.

중요한 사실은 문화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문화를 국민의 삶의 질(質)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정책의 문제이며, 이는 차기 대통령의 무겁고 큰 책임의 숙제이다.

나라의 문화를 세우는, 문화예술을 창의적 ‘창조산업’ 으로 일으키는 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의 문화대통령, 교육대통령을 화급하게 요청하고 필요로 하는 절박한 현실.

창조산업의 육성과 발전의 계기를 통해 나라 전체에 창의 정신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국운(國運) 전환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창조산업’계획의 시작과 수립으로부터 -

차기 대통령은 취임직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창조산업위원회’를 두어 김대중 정부시절 IT 진흥책 이상으로 ‘창조한국’의 일대 **진양체(震央體)**를 구성한다.

정부 내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창조산업 Task Force 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문화와 예술부문 프로젝트 대상 20개 창조산업 분야에 대한 현황과 향후 전망의 구체적 계획과 대안, 실천 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창조산업 ‘프로젝트 20’ 정책 대상-**

- 1) 한국학, 문학
- 2) 국학번역
- 3) 지역학, 지역문화
- 4) 번역, 출판
- 5) 영화, 만화
- 6) 방송(E-ABS 한, 중, 일 3국 위성 문화, 역사, 예술 텔레비전채널)
- 7) 건축
- 8) 패션
- 9) 산업디자인
- 10) 공연예술
- 11) 매체, 미디어,
- 12) 음악
- 13) 현대미술
- 14) 전통예술
- 15) 소프트웨어,
- 16) 스포츠학, 스포츠 매니지먼트
- 17) 복합예술(combined arts)
- 18) 관광산업
- 19) 게임, 콘텐츠
- 20)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계획기간-**

- 우선추진 2008년부터 2009년
- 집중추진 2009년부터 2011년
- 장기추진 2011년 이후 추진과제

### 3대 비전-

#### 국가발전 전략 정책으로 문화예술산업을 ‘창조산업’ 으로 획기적 진흥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창조산업’ 을 일으켜 21세기 국가 비전을 이끈다.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창의적 산업이 근본이며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문화예술 및 문화의 가치를 국가 전략산업의 핵으로 인식, 국가 창조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나라발전을 도모한다.

#### 창의적인 지역발전, 이바지하는 세계발전

한국의 미래는 창의적인 지역발전에 달려있다. 지역은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공간의 실존적 지점이자 국가 공동체 매개로의 거점(據點)들이다. 지역주민의 동력과 활로를 창의성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경제로 활성화시켜 삶을 윤택하게 하며, 세계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조적 자원을 지역을 시작으로 일군다.

#### 창의적인 국가, 창조적 시민

창조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 미래의 대계(大系)를 정비하고 아울러 수반되는 국가시스템의 일대 혁신은 지식의 흐름과 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 풍토를 진작, 모든 국민이 가치 있는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국가’의 지평을 연다.

## 5대 기본방향-

### 문화예술의 창조성 일대 신장(伸張)

창작기반을 대폭 강화하며 최고 수준의 창의성 있는 예술 문화의 생산을 촉진시킨다.

- 1) 20대 정책 대상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실험성 강한 예술 문화 콘텐츠 지원
- 2)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내외적 인프라 구축
- 3) 우수성과 혁신을 평가하고 고무(鼓舞)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

### 국민 일반의 예술 문화 수용환경(受用環境) 일대 개선

일상생활 속에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예술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다.

- 1) 제반 교육 과정에서 예술 문화교육의 대폭 강화를 통한 예술 문화 수용능력 배양
- 2) 예술의 공익성, 산업성의 실재적 인식 확대
- 3) 참여하고 즐기며 누리는 예술 문화

### ‘한국의 프로티어는 한국 안에 있다’는 국민 일반의 창의성 견인

21세기 한국의 승패는 결국 창의성의 진작(振作)에 달려있다.

- 1) 국민 일반에 창의성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회 풍토 조성
- 2) 재능의 발휘와 혁신이 일상생활에서 꽃피우는 환경
- 3) 예술과 문화의 수요 창출 기반 대책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명, 발견을 상품과 서비스로

### 예술 문화 전문인력 양성의 근본 대책 수립

인재양성은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 1) 직능별 장르별 전문인력 획기적 배가
- 2)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는 전문인력 배출 시스템 확보
- 3) 국공립 예술기구의 개편과 혁신을 통한 전문인력 배출

### 예술 문화 정책, 행정체계 일대 쇄신, 문화관광부를 ‘창조산업’ 지원부서로

민주적 행정과 행정 전문성은 이제 필수요소이다.

- 1) 예술 문화의 창작, 매개, 유통, 수용, 소비에 따르는 정책 난맥상 개혁
- 2) 지적재산권, 저작권보호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 정비 및 구축
- 3) 창조산업과 지역개발의 연계를 통한 생산성 제고(提高)

## ‘창조산업’ 정책 기조(基調) 12-

- 1) **예술 문화산업을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으로의 ‘창조산업’으로,**  
 예술 문화산업은 지식정보사회의 국가 경쟁력 원천,  
 예술 문화의 사회적 다복합 기능을 증대시키며 획기적인 **고용증대(5년간 직간접 200만명)를 창출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상상력 창의력이 21세기 국가생산성의 기초가 됨을 인식,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예술 문화의 가치가 널리 발현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실현 핵심 의제로 택한다.
  
- 2) **국민 일반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개인의 창조성, 재능, 기술에 의미를 부여하며** 지적특성(知的特性)을 유연하게 활용, 국부와 일자리 창출의 잠재성을 인식, 이의 생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관련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면서 정부 부서는 창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창작산업이 필요로 하는 바를 분석하고, 예술 문화산업이 ‘창조산업’으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정비 운영의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 3) **‘창조산업’이 지역 재생(再生)과 지역 생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 창의적인 지역 커뮤니티를 안출하여 국가 각 지역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역학’을 창출,** 지역의 예술 문화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일으킨다.** 이는 창조산업이 국가 경제 기반의 혁신산업으로 미래의 지역경제 산업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연계를 심화, 확대하고 소, 중, 대도시 및 농, 어촌 산촌 환경에 적절한 창작 산업 방안을 실천 정책으로 입안한다.
  
- 4) **‘창조산업’의 원천인 예술 문화의 교육을 통한 국민 일반의 문화 수용 능력을 키운다.** 공교육 붕괴에 더하여 문화 예술 교육은 취약(脆弱)의 정도가 아니라, 전무(全無)한 현실이다. 이는 공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면서 교육의 본질인 민주주의 시민으로 내면성을 함유(含有)하는 인간성에 대한 교육이 실종된 것에 연유한다. 예술 문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강화시켜 삶의 본원적 가치와 내용을 되찾는 계기를 획득함과 동시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복돋우는 체계적 예술 문화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 의식을 배양함을 정책의 우선으로 한다.

5) **‘창조산업’의 공공성은 문화 예술의 일상 생활화와 일반 시민의 예술참여 동기를 활성화 시킨다.**

창작 자체는 특별한 재능의 산물이지만 민주사회는 예술과 문화의 결과와 가치들을 더불어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공의 기반, 시설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 보건의 전통적 복지 기반만큼 삶의 실제적인 교양과 품격 있는 삶을 누릴 권리 또한 사회 국가의 유무형의 자원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식민지 경험과 전쟁 이후 억압, 혼돈, 황폐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회 문화적 위기는 예술 문화적 가치를 통해 개개인의 창의력을 분발하고 자기계발과 사회계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건이 문제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사회 시민의 권리이자 상호 소통의 방식이다.

6) **예술 문화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 국가의 지원은**

**예술 문화의 공공성, 국가 경제적 생산성의 필요에 절대 상관하기 때문이다.**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시혜적(施惠的) 지원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일깨우는 국가 생산성과 국가 경제투자의 개념으로 제대로 인식할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창조산업은 창작 정신에 호응하여 국가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본 입장임을 천명한다.

7) **예술 문화의 배양을 통한 창조산업은 국가와 국민이 대내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일깨운다.**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 넓게는 세계와 국제적 평화를 꾀할 수 있는 역할로 예술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계발해 내야 한다. 이는 한류(韓流)의 현상을 보다 세련되고 깊이 있는 문화예술로 만들어 획득하는 '대화'의 능력이다.

이미 중국은 세계를 목표로 중국 예술의 전파에 몰두하고, 일본은 일본 문화를 하나의 세계문화 체제로 국제화를 지향한지 오래인데, 한국만 그 정체성에서 혼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예술은, 국제 소통능력(global literacy)의 역할이 주어진다. 세계 언어로서의 예술로 세계에 말을 걸 수 있는 능력과 세계와 같이 새로운 삶의 문화양식을 만들 수 있는 것에 예술 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의 본질에 해당한다.

8) **창조산업 진흥을 위한 획기적 재원 증대와 확충을 통해 국가 산업 경제력을 일으킨다.** 김대중 정부시절 대개가 경상비 위주의 재원이거나 문화관광부 예산 1조원 시대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 도리어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창조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문화관광부의 예산은 시대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연간 3조원 이상을 기본 예산으로 투입해야 하고, 프로젝트 대상 20개 사업의 정부 관련부처의 장르 산업별 예산 투입이 향후 연간 최소 3조 이상, 5년간 15조 이상 병행 투자되어야만 한다. 차기 정부는 창조산업의 일대 진흥을 위한 특별 예산을 안출한다.



9)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창조산업 진흥의 구체적 정책 실행 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규제철폐의 차원을 뛰어 넘어 예술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적극적 조건과 확충이 필요, 문화예술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지식정보사회의 현실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 법령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10) **탁월한 예술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내 예술관련 대학이나 학과의 과다(過多)는 유례없는 양적 성장을 보였지만 그 내용의 성과는 미미하며 심지어 빈곤하기까지 하다. 세계에 뛰어난 예술 대학과 예술 문화 관련 연구소와의 연계, 세계적 수준의 예술 연구소의 국내 설립 지원, 예술과 창의적 예술과학의 진흥을 위한 국제 예술시장과 산업시장을 겨냥하는 과감한 학제적(學濟的) 교육이 필수이다. 이의 진흥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와 정책 집행이 있어야만 한다.

11) **국, 공립 예술단체, 학교 교수의 운영쇄신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예술적 재능이나 전문성보다는 끼리끼리의 전근대적 ‘농경사회’ 특성인 안면과 인맥으로 자리보전하기와 국공립 단체장의 회전문 인사는 민주 사회의 예술제도 자체를 역행한다. 군사독재시대 일부 예술종사자의 기회의 독식과 전횡, 이후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싹쓸이식 예술 기회의 일부층 전유(專有)는 큰 사회적 문제를 계속 야기하고 있다. 예술의 건강성, 문화의 전문성을 통한 사회적 예우와 존중은 일부 예술 문화 기득권자들의 특권의식과는 구분되어야 옳다. 따라서 일부 세력만의 예술환경 점유로 인한 무수한 폐단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예술 문화를 기초로 하는 창조산업 정책이 비로소 시작된다.

12) **창조산업 종사자를 인정하는, 특히 창의성이 존중받는 사회 풍토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별한 대우’가 아닌 ‘마땅한 처우’의 문제이며

‘정신과 눈’으로의 예술 문화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권익은 옹호되어야 하며,

생계를 걱정하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창작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예술 문화의 수용과 소비가 창출되고 신장되어야 나라의 문화와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술 문화 종사자를 존중하는 환경은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 내어야 한다.

**‘창조산업’으로 한국의 새로운 국가 가능성을 일깨운다.**

### Questions-

**혹자는 질문할 것이다.** 영국이나 유럽은 오랜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 예술 산업을 ‘창의산업’으로 일으킬 수 있는 토대가 사전에 충분했다.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의회주의라는 모델을 만들어냈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다. 사회운동의 중심인 노동조합도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세계에 내세울만한 것을 만든 것이 거의 없다.  
한국에서 ‘창조산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 Answers-

하지만 영국도 그들의 대단한 자존심과 자만심도 2차 대전이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인정하기는 힘들어도 더 이상 영국이 세계의 공장도, 세계의 중심도 아님을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산업에 눈을 뜬 것이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다시 세계 최강대국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가능성의 문은 모든 국가에게 열려 있다.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떨리는 중앙아시아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를 보라. 그 어느 누가 이런 예상을 했던가? 한류의 바람이 불기까지 정부의 준비된 정책이란 아예 없었다.

그러나 한류는 우리의 신바람에 바탕을 두고 퍼져나갔다. 물론 한류는 더 세련되고 더 깊은 문화예술로 발전되어야 한다.

우린 한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이다.

끊임없이 문제는, 국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산업영역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창조산업, 2008년부터 5년간 직간접 200만명 일자리 창출



---

## 장기적 비전으로 공적 투자 늘리자

문화력은 장기적인 경쟁력이다.

문화가 국력의 중심에 있는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에 제대로 된 미술관 하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특히 문화예술이 21세기 국가경제의 기초이자 근간이라는 세계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현대미술관의 중요성은 지역과 국가마다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술관 질의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 어떻게 하면 예술의 창의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국가의 발전과 함께 인간다운 삶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끊임 없이 모색한다.

## 국립현대미술관, 트라이앵글 스트럭처얼 제안

영국의 경우, 수상실이 나서서 데이트 모던 갤러리라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만들고 총력을 기울여 현대미술의 세계 리드를 실현시키고자 했고,

프랑스는 루브르와 오르세이, 퐁피두로 이어지는 전통과 현대의 연결을 통해 문화의 자부심을 구축한 것이 드골 이후 퐁피두 미테랑에 이어지는 국가문화총체개발 프로그램 안의 결과였다.

미국이 2004년에 수립한 창의미국 Creative America 에서 전 미국의 미술관들을 개성화시켜 ‘미국의 자부심으로 미국을 리드 한다’ 는 대담한 시도 등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역량을 거듭 쇄신시킬 것을 자극한다.

우리의 경우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본관을 중심으로 하되 그간 미술계에서 수많이 거론되었던 광화문 경복궁 옆 기무사 터에 현대미술관을 설립하고 덕수궁 석조전 동관과 서관을 통합하여 덕수궁근대미술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시작하는 최적의 시점이 지금 이 때다.

과천 본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소장센터, 연구센터, 미술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케 하고, 기무사 터에는 첨단예술의 전초기지로 현대미술관을, 덕수궁미술관은 우리나라의 현대성이 어떤 뿌리와 근거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삼각체제의 미술관 시스템을 갖추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새로운 기본 형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예술 문화가 우리 삶에 매우 소중하다는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예술 문화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갖고 공적 투자를 해야 할 때임을 깊이 각성해야 한다.

**예술 문화는 우리시대의 희망이자 한국의 미래에 대한 경제동력이기 때문이다.**

## 2. 지역학의 진흥을 통한 지역 발전

지역학은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다져 삶의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측면이다.

지역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를 포섭하는 자세이며,  
경제의 세계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 지역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학의 네트워크 구축과 실천 - 지역학 개발

강력한 **지역경제**로 나아갈 것을 주창한다.  
지역학은 지역경제를 이끈다.

지역특성화 발전은 지역의 조건과 특성을 고려,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근본에 있어서는 종래의 방식인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형태일 수 없다. 지역의 판단과 지역의 역량을 키우고 아름다운 국토와 삶의 풍요를 지향하는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일때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국의 대학이 특성과 개성없이 종합대학화의 형태를 띠고있다. 전문적 기술이나 실질적 학문보다는 서울의 일부 대학 형태를 획일적으로 모방하는 커리큘럼으로 채워져있다. 지역학은 각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지역에 관한 총체적이며 입체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DB를 통하여 지역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고용을 가능케하며 지방성을 강화시킨다.

지역학은 작은 지역사회의 단위로부터 일정크기의 지역사회 규모로 구획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학은 경상북도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학문으로 경북대학이 학과을 만들어 성립되며 경상북도 내의 작은 도시인 경주시의 경우 경주대학이 경주시를 대상으로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게되는, 식이다.

이리학, 전주학, 문경학, 상주학, 대전학, 부산학, 부여학.....

구축과 실현방법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BK21사업 등, 전국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대학 소재지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구하는 지역학 진흥으로 경쟁을 유도한다.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이 상호협력 주체가 되어 세부 실현계획안을 세운다.

**지역학**은 지역주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창조성을 전개시킨다. 지역학은 세계화에 맞서면서 지역의 붕괴를 막는다. 식물, 씨앗, 지식, 물과 식량을 지킨다.

식량과 물은 지구에 사는 인간들과 모든 종들의 삶을 가능케 한다. 지역과 지역학은 이를 담보한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식량과 물, 그것들의 오염에서 나오고 있으며, 또한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과 지역학은 문제를 대처하고 관리해야 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지역학을 제창, 고양하는 대대적인 실천이 체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구의 세계화에서 국가의 대응이란 한계가 있음을 점차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을 통해서, 지역을 넘어서, 보다 더 큰 지역적인 그리고 최선에 있어서는 전지구적인 경제의 관리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 지역학의 주제

도민, 시민, 지역민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은?  
환경의 보존  
쓰레기 재생 처리  
지역의 주제, 지역의 프로그램의 이해, 그리고 교육  
지역 여성의 사회적 역할  
도시화와 균형  
물의 보존  
지역 문화예술의 창출과 보호  
경험 네트워크의 구축  
전문화 및 협업 활성화  
연관산업 DB 연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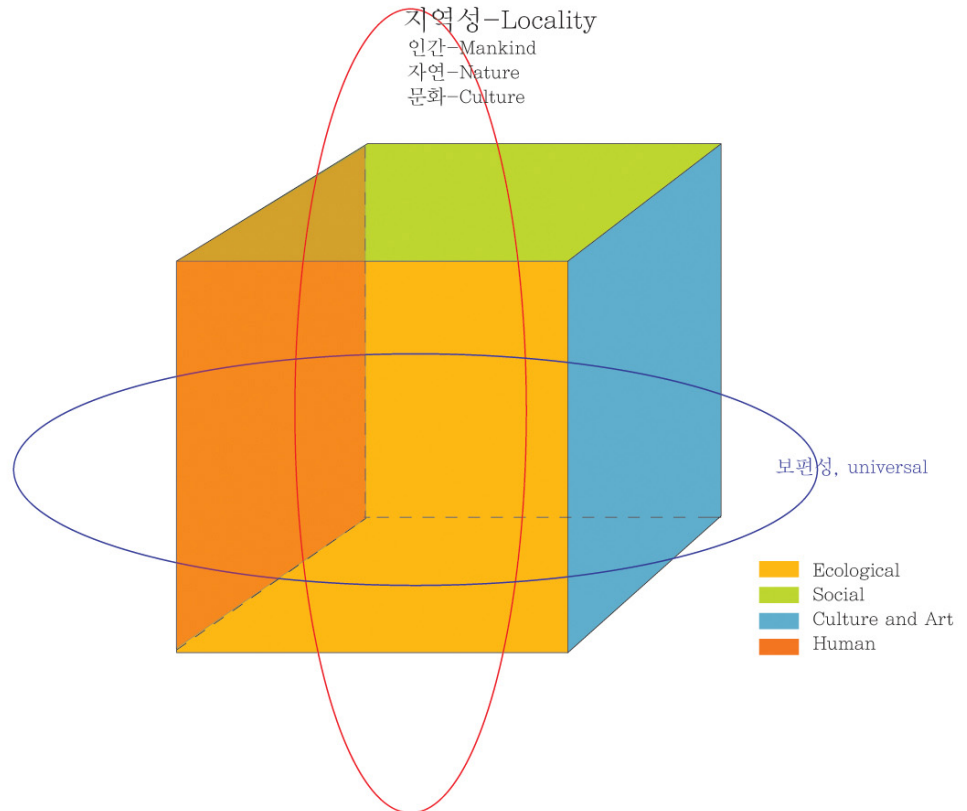
### 지역학의 활용 영역

혁신적 산업클러스터의 공간적 확산  
지역혁신 시스템(RIS)구축  
지역과 중앙간의 제도적, 종합적 지원(Package화)  
중앙, 지방정부간 협력적 분권  
산,학,연 기술개발자원의 결집  
기술개발, 창업보육, 시험생산 등  
지역특화기술개발  
차별적 기술력 보유  
지역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산업발전과 연계된 기초기술연구 및 첨단인력 양성  
지역중점사업의 특정산업 기술개발 및 산업계 기술이전  
소프트웨어 신기술 창업  
지역 역량 강화

## 지역학 관계내용

MIND 생각	주체적 주민
BODY 신체	노동, 영양, 건강
SPIRIT 영혼	사회 속에서 서로간에 바른 믿음의 역할과 정신을 조명한다. 역사, 문화, 예술
WORK 일	자립과 다양성의 확보될 만큼 충분한 적정기술의 채택 전송기술을 발굴, 연구하고 생태적 인간적 기술을 개발한다.
LEARNING 배움	생은 창조다. 평생 배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TRANSACTION 거래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역내, 지역과 지역, 지역과 세계
REST 휴식	지역의 자연속에 촉각적, 감각적인 공간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활력을 되찾자.
PLAY 놀이	전송놀이의 계승및 커뮤니케이션의 통로
LOCAL 지역	환경과 지역 안에서 인간됨을 되찾고 지역성을 최대한 살려내자.
LIVING ISLAND 삶의 터전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다.
GLOBAL 세계화	다른 각도에서 세계를 보고 세계 시민이 된다는 것은
COMMUNICATION 대화	지역주민과 자치능력, 자치학문의 실현
LOCAL IDENTITY 정체성 또는 올바른 역사성	지역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귀속감, 향토애
MOBILITY 이동	근거리의 자연친화적 교통수단, 자전거

지역학(Regional science)  
CONCEPT OF NEW VISION



삶과 생활	Living and Working
환경과 발달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대화와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건강과 영향	Health and Nutrition
휴식과 운동성	Leisure and Mobility

### 3. 국가 재생 에너지 산업

에너지 전쟁은 이제 현실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자. 이제부터라도 능동적, 창의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06년,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와 2위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 합계인 702억8000만 불 보다 더 큰 액수인 855억7000만 불이 에너지 수입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이 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는 재생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연쇄적인 일자리를 창출한 사실에 주목하자. 특히, 소기업들, 지역에 기반을 둔 작은 기업들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2005년 현재 170,000명이 재생 에너지 산업에 종사

(출처 [www.unendlich-viel-energie.de/fileadmin/?dokumente/andere/BG-papers-statistics.pdf](http://www.unendlich-viel-energie.de/fileadmin/?dokumente/andere/BG-papers-statistics.pdf))

## 문제의 인식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졌으며 생산에 배럴당 5불 정도만 소요된다는 전쟁 전인 이라크의 원유가는 이미 옛말  
지금 유가(油價)는 가파르게 100불 가까이 올랐다.

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源) 공급과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유가 1달러 상승 때 1년간 1조 2천억 원 더 들어물가 오르고 경상적자 늘어 경제에 부담

세계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국제유가 곧 오일쇼크가 올 것이라는 경고

한국은 세계 4위의 석유 수입국 연간 8억 배럴의 원유 수입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 경상수지와 기업의 수익성 악화,

물가상승과 소비침체의 악순환

화석연료의 한계, 기후변화, 지구생태계의 교란, 악순환,

마침내 우리나라가 직면한 정말로 어려운 사안들에 대처해야 하는 절박한 때

‘지속가능한 경제’에 관한 국가 의지를 규합할 때

자주 잊혀지는 질문, “발전은 좋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어떤 발전인가?”를 제기할 때

지속불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고, 시민적, 사회적, 환경적 권리들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때이다.

## 세계 각국은 이미 이와 같이 불안한 석유를 대신할 재생에너지 산업개발과 시장경쟁에 돌입

화석에너지 고갈과 가격폭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억제 등

수십년 내에 석유에 버금가는 주 에너지원으로 대체에너지산업이 현실

대체에너지산업은 이용량의 급증과 더불어 21세기의 유망산업

선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CO2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목표를 정하여 중점 투자

이로 인해 최근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30%의 높은 성장률

앞으로 **대체에너지가 IT, BT산업과 더불어 미래 차세대산업으로 급신장**

## 우리는 과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한국

한국의 에너지 소비와 공급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현재의 기후 변화와 석유 위기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를 보면, 1970년부터 80년까지 10년 동안 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8.4%씩 증가했는데, 이 추세는 80년대에도 이어져 90년까지 7.8% 증가했고, 2000년까지도 7.5%를 유지했다. 80년대 경제성장률 9%에 비해 90년대 경제성장률은 6.2%로 줄어들었지만,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생산 단위당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에너지 효율이 악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음.

경제성장이 50% 대 였지만, 에너지 소비는 1970년대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와 상당한 대조

에너지원 구성비는 2004년 통계에 따르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석유(45.7%), 다음이 석탄(24.1%), 원자력(14.8%), LNG(12.9%), 기타(재생가능에너지 포함, 1.8%)로 일차 에너지 공급이 전적으로 화석 연료인 석유와 석탄에 의지하고 있음.  
이는 우리의 에너지 공급 구조가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에 의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임을 의미, 절반이 넘는 일차 에너지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석유 정점으로 인한 위기에 도 절대적으로 취약.

일차 에너지 소비와 더불어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통계가 전력 소비  
1970년부터 80년까지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15.5%, 그 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1.2%, 1990년부터 2000년까지 9.8%.  
전력 소비 역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거의 증가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늘어나는 전력 공급을 맞추기 위해 우리의 경제적 비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많이 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보게 되면, 2006년 현재 96.6%를 수입에 의존하고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은 3.4%에 불과,  
국외 유가 상황이나 자원 고갈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황

이렇게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우리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바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너지 자주 개발이 언급되고 있지만 국제적인 에너지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그러나 이 정책은 뚜렷한 한계

###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에너지원에 기반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구조를 변화시켜야 함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지(수출-수입)의 평균 250% 이상을 에너지 수입으로 다시 지출하는 실정,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2006년의 경우 무역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지의 4배 이상을 에너지 수입으로 지출.

2006년 에너지 수입물량은 전년대비 22억8300만toe(toe는 석유환산톤, 석유 1톤 연소시 발생하는 에너지)에서 23억2700만ton로 1.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수입 금액에 있어서는 고유가로 인해 667억불에서 855억7000만불로 28.3%나 상승 이는 우리나라 2006년 전체 수입액인 3094억불의 27.7%로 높은 비율을 차지

**재생가능에너지와 같이 자립적인 에너지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

덴마크나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여 절대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증대를 높여 에너지 수급의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

그러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비전2030이나 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에너지비전'은 신재생에너지보급율을 2.1%에서 9%로 높이고, 석유 의존도를 현재의 44%에서 35%로 낮춘다는 발전적인 제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음

에너지 수요 절감 대신에 외교를 통한 석유 자원 등의 자주개발을 주장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획기적인 확충 대신, 원자력과 수소 경제를 토대로 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억제가 선호되고 있음

**이는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 가능 사회라는 보다 폭넓은 지향점보다는 성장 위주의 산업 정책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3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서도 드러남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력의 43%는 원자력이 담당하게 된다. 재생가능에너지로 얻는 전력의 비율은 수력 포함해서 1.5%에 불과

소비전력의 3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고자 하는 독일의 정책에 비하면,

우리의 정책은 그저 구색 갖추기에 불과

이런 정책은 결국 위기에 허약한 우리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더욱 악화시킴.

정책 전환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

**성장만으로 고용증대가 다시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은 낡은 경제학의 시대착오적인 착각**

한국뿐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성장을 거듭하던 세계경제는 현재 심각한 대량 실업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문제에 봉착했고,

석유에너지 고갈로 인한 전쟁까지 치르고 있는 상황

전지구적인 위기

##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일자리 구축 - 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해서만 경제 기적이 가능한 세계현실

### 완전고용 '자연'속에 해답 있어

세계 각국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디젤 등 급속도 개발  
고용증대를 위한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  
대체에너지 산업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크고 기술집약적  
따라서 이 같은 고부가 가치의 세계시장을 또 다시 남에게 내주고 기술을 수입하는 것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크나큰 짐을 지우게 되는 것.

현 세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의 생태화'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형태의 노동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 삶을 위한 일자리를 자연 속에서 재발견, 새로운 노동과 일자리들을 창출

에너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많은 부문에서 변혁이 가능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가 더 이상 환경단체의 사안이 아님,  
독일의 풍력발전은 2005년 현재 전체 전기생산량 중 6% 정도 생산  
풍력발전소만 1만 7천여 개 존재  
이를 통해 5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독일 정부에 의해 육성된 풍력발전산업은 전 세계로 풍력발전기를 수출  
1만 7천 개의 풍력발전기가 주는 이점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 외에도  
1억8천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환경 효과

독일에서는 1980년 몇몇 이상적인 시민들에 의해서 설립된 풍력발전기를 통해  
3만5천 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정도였지만,  
1990년에 독일정부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 1년 동안 1천7백만 kWh 전기를 생산,  
1만 7천가구에 전기를 공급  
2006년에는 석유회사 Shell 또한 풍력발전에 뛰어들어 영국 북해에 세우는 200개의 풍력발전기는  
원자력발전소 1개가 생산하는 에너지와 맞먹어

### 세계 각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세

한국에 있는 20개의 원자력발전소를 당장은 없앨 수 없지만, 점차 에너지 정책 전환해야 북핵 문제  
도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 있어  
한반도 평화가 끊임없이 위협 받을 수 있음  
또 핵발전소는 항상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이 고용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

미국의 REPP(재생가능에너지정책프로젝트)에서는 2006년에 미연방정부에서 발전 분야 이산 화 탄소 배출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 이 목적을 위해서 10년간 18,500MW의 재생가능용량을 해마다 더해가기로 하면, 관련 기업들이 산재해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95000개의 일자리 창출.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2002년의 또 다른 보고서는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1MW 당 1.02명의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지만, 풍력의 경우 2.57명, 태양광의 경우 7.14명, 태양열의 경우 5.71명의 고용창출이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즉, 풍력이 천연가스에 비해 70%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는 것.

이렇게 유럽 및 미국 주정부 등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기후 변화 해결, 미래세대 에너지 안보의 확보와 더불어 고용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 때문

###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면 새로운 경제기적이 가능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추진 필요

세계 각국 경제규모 및 에너지수급여건에 따라 중점기술개발 분야를 선정해 기술개발과 이용확대 추진, 미국, 일본, 독일 EU 등은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석탄액화 등 첨단 미래기술을 포함하는 모든 기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수립 대형/복합 시스템화 프로젝트 규모로 중장기계획으로 개발

우리는 해외로부터 96%이상 에너지를 수입,

경제적 부담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CO2 저감정책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인 대체에너지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이를 위해 시범보급과 지역에너지 사업의 확대,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우선구매

발전전력 차액보전,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실증연구와 성능평가

제품의 규격표준화,

제품성능 인증제 도입,

보조 및 용자지원

세금감면의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보급프로그램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추진해나가야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대체에너지를

더 이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야

## 우리는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산업을 통해 5년간 얼마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까?

각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2004년 기준으로 제조업·운전·정비 분야에 대략 70만~80만명,  
여기에 식물재배를 통해 연료를 생산하는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자는 대략 90만~100만 명 정  
도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1차 에너지의 13%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전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종사자 수는 대략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

특히 기술집약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분야에는 100만명 정도  
현재 세계적으로 이 분야 고용인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오히려 향후 국내외 시장의 규모는 커질 전망, 우리에게 좋은 기회

만약 우리가 이 분야에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투자와 고용을 만들어 준비한다면  
향후 확대될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지금 바로 이를 준비하는 시기

과거의 산업양식, 미래는 친환경 지식산업  
국토 강제 변화로 성장하는 방식은 이미 과거의 퇴행적 시대착오적 방식  
경부운하를 주장하는 이명박씨는 과거에 머물러 있음.

2020년이면 현재의 자동차 시장보다 크게 앞서게 될 전망  
미래의 한국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 분야를 준비하고 개척  
경제성장도 이루고 환경도 지키는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지금의 0.5%가 아닌  
**5% 정도 비율로 향후 5년 동안 성장시킨다면**  
**25만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2010년이면 재생가능 대체에너지 산업은 1600억 불 시장

## 4. 환경산업

지금 당장 한국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완의 분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잠재적인 가치는 기존의 산업질서를 완전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 환경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5천 5백억 달러로 이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 1조 1천억 달러의 절반에 달한다.

## 문제의 인식-

전 지구적 시야로 세상을 보자,  
 자연의 위기를 간과한 채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의 폐해는  
 인간적 비참과 자연적 재앙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

이제 환경의 문제는 더 이상 에콜로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

지구의 생물-물리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경제 생산 방식이 받아들여져야

**모방 발전을 추구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오랫동안 선진국으로 불려왔던 나라의 방식들이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

자연을 파괴하고 고갈시키는 방식, 그 결과, 물, 목재, 석유, 광물질 등과 같은 원료로서, 지하자원, 거주지, 사회 기반시설에 쓰이는 토지, 그리고 토양, 바다, 대기와 같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는 장소로서 기능하는 자연체계가 경제개발 때문에 파괴되고 심각하게 훼손.

지난 50년간의 환경적 추세를 보자.  
 온실효과 가스 방출량은 허용수준을 초과하였고,  
 전세계적으로 경작 가능 토지 가운데 3분의 1이 손상,  
 열대우림의 3분의 1,  
 이용가능한 담수의 4분의 1이 훼손,  
 동식물종의 소멸, 어족자원의 4분의 1이 사라졌다.  
 단 몇 세대 만에 자연을 먹어치운 것은 전 세계 인구 중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잔치는 빠르게 종말로 치닫고 있다.

극적인 상황,  
 현재, 세계는 지구가 재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비.

지구상 모든 국가가 중화학 중공업 위주의 산업모델을 따른다면  
 경제 발전에 필요한 탄소처리를 위해서 지구가 다섯 개나 있어야.  
 그러나 인간에게는 지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든 재난의 근원.

과연 한국,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당장의 문제인 양극화를 들여다보자,  
 세계화된 부자들과 지역화된 가난한 자(貧者)들 사이의 균열  
 사회 양극화의 분할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성장경제의 단극화 사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움

지금 개발이 제약을 받는 것은 고기잡이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고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 양수기의 부족이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 때문,  
 전기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삼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거나 회피될 수 있는가?  
 어떤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자연의 회소성에 다 같이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제안하는 대답은 자연과 인간 모두를 낭비하는 산업경제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원을 아끼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계에 ‘공짜 재화’가 — 순수한 물, 청정한 공기, 탄화수소 연소, 처너림, 광택 —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경제는 대규모의 에너지 및 자원 집약적 생산방식을 선호할 것이며, 거기서 노동력은 주 변화 될 것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만약 경제가 자원의 무절제한 사용을 억제하고, 비회석 자원을 특별히 우대한다면, 좀 더 많은 노동력과 지능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의 생산방식이 번영하게 될 것이다.

즉, **자원의 사용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동시에 취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람들을 대량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낭비되고 있는 전력과 석유와 오래된 숲에서 나온 펄프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즉, 자원을 최소한도로 이용하는 경제에서는 사람의 힘과, 기술, 지식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말의 참된 뜻에서 탈산업 사회일 것이다. 거기서 하드웨어와 생물학적 생산성, 그리고 인간의 지성 사이의 새로운 균형이 발견될 것이다.

성장의 측면에서 보아도 해묵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보다는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  
경전철, 탈 중심화된 에너지 생산, 대중교통, 오수 처리, 지역적 특성에 맞춘 주택, 지역 중심 식량체계, 탈자동차 중심 도시환경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한 국가를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경제적이며, 좀 더 공평한 개발패턴을 향해 나가게 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만이 아니라 자연총생산(Gross Nature Product)을 증대시키는 성장만이 공동체의 삶의 조건을 향상

그러지 않을 경우 성장은 소득과 생존능력의 상실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성장 자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과 생태계의 보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구조화하는 것  
재생 가능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물의 보존, 바이오매스에 기초한 사업 등

생명계의 신중한 사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한, 성장 그 자체를 위한 경제성장은 자멸적 환경개선이 가난한 사람들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듯이, 환경악화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에콜로지와 형평성은 모든 생계를 위한 전략의 핵심이다.**

땅, 물, 그리고 생계  
토질 악화, 땅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빈곤을 발생시키는 핵심적 요인 토양의 비옥도가 떨어지면 농업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는 다시 비싼 비료로 보충이 되어야, 토양 악화는 물 부족으로 더욱 심화되는데, 이는 토양의 염화와 침식을 초래  
이런 까닭에 토지와 수자원의 악화는 소농의 생계를 파괴  
이런 현상들의 영향을 받게 된 농민들은 농업생산성의 저하, 생계감소, 이농으로 이어지는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오늘 한국인들 삶의 방식이 과연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가?  
이 좁은 국토가 병들고 아플 때 이 땅에 사는 한국인들은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는가?**

## 환경산업, 고용창출과 국토보존의 근거

가장 중요한 발전은 조용히 소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날 세계적 기업가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fundamental) 변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헬무트 콜 정부시절에 독일에서 환경론적 경제기적이  
활짝 꽃피우기 시작,  
환경이노베이션- 기업이 환경친화적이면서 이윤을 내는 법에 착안  
환경전문가들은 환경기술시장에서 엄청난 이윤을 보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재활용기술, 태양열기술, 여과기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로써 최대의 수혜를 입는 나라는 다름 아닌 바로 독일  
독일은 환경보호기준이 높아 다른 외국보다 명백히 기술적인 이노베이션에서 탁월

### 오늘날 환경관련 경제산업에 약 200만명의 일자리 창출

이것은 독일 전체 자동차산업의 고용인력을 훨씬 웃도는 수치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독일만큼 환경기술을 수출해 돈을 벌고 있지 못함.  
독일이 이처럼 환경산업에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한때 그렇게도 무시하고  
좌약시했던 환경운동 덕분.  
환경단체와 환경에 관심 있는 정치가들이 나서서 기업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비로소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환경의식적인 경영에 관심을 두기 시작.

###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읽고 미래를 보는 정치적 리더십

1988년부터 독일의 경제학은 거의 '저돌적으로' 환경학에 복무.  
그 흥미진진한 결과는, **환경보호가 이윤을 가져다준다는 것.**  
에너지절약, 재료절약 그리고 이미지개선과 수출증대  
이제는 환경감사(Oeko-Auditing) 환경수지(Oeko-Bilanz)  
환경통제(Oeko-Controlling)라는 것이 현대 기업경영의 ABC로.  
화학산업대기업들은 자신들의 낡은 도구들을 버리고 대체용재료로 대체하고 있다.  
제지산업과 출판사는 지속적인 삼림경제가 가능하도록 나무를 다룰 것을 요구.  
포장회사들은 사료로 전환할 수 있는 요구르트통을 만든다.

유럽연합은 올해 환경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7.9% 높게 편성  
유럽연합은 지구 온난화와의 전쟁을 통해 '세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섬  
미래 산업 선점, 삶의 질 담보, 에너지 안보 확보

## 환경산업은 유럽의 미래 엔진

“단지 푸른 하늘만 바라는 게 아니다. 환경 분야는 기술시장이 있고, 지금 혁신하면 미래 상품을 팔 수 있다.” 독일 외무부 유럽연합국 하디 버클러 부국장의 말 그는 “우리는 지금 조금 투자해서 나중에 30~40%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테초 독일 알프레드오펜하임 유럽연구센터 연구원은 “돈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썼다. 그는 “환경은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미국은 일단 시작하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적응하는 만큼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먼저 시작해야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유럽에 부를 안겼듯, ‘제2의 산업혁명’인 환경산업을 선점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관련한 각종 기준의 엄격한 적용은 자연스레 관련 기술의 개발을 앞당긴다.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 전시된 BMW 325i 승용차의 안내서에는 ‘1km당 203g CO2 배출’이라고 적혀 있었다.

독일 프리드리히버트재단 국제정치 연구단의 크리스티앙 켈러만 박사는 “환경분야는 유럽연합의 산업 발전을 이끌 미래 엔진”이라고 말했다.

환경문제로 하나된 유럽=환경문제가 경제적 관점에서 유럽의 ‘블루오션’이라면, 삶의 질이란 관점에서 유럽인들을 한데 묶어 주는 매개체이다.

유럽은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지표면이 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빙하가 녹아 물에 잠기는 위협에 시달리고, 스위스 알프스에서는 지난 겨울 눈이 오지 않은 탓에 스키시즌이 짧아졌다. 겨울철 이상난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간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평균 섭씨 2도 이상 높았다.

유럽인들에게 환경파괴는 현실적 위기이다. 벨기에에서 만난 덴마크인 이렌 한센은 “날씨가 진짜 미쳤다. 지구가 파괴되고 아이들은 이상한 병을 앓는다”고 말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조사에서, 유럽인 72%가 환경을 유럽연합이 주력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20년 가까운 녹색당의 활동 등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유럽연합이 환경문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경이 없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통로가 바로 유럽연합이기 때문이다. 로마조약 50돌을 맞아 유럽연합이 25일 발표한 ‘베를린 선언’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선언은 “우리는 국경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과 기후보호 문제를 공동으로 주도하고, 전지구적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파리·브뤼셀·베를린/글·한겨레신문 김순배 기자 - 2007년 03월 28일)

환경산업, 한국의 뉴프론티어 한국 안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는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0~30년 뒤쳐진 산업분야도 바로 따라 잡았다.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반도체 및 IT 강국이 됐다.

물론 하드웨어적 발전이고 소프트웨어 발전은 획기적으로 진작  
계발되어야만 한다.

환경산업 기술과 발전도 국가와 정부, 기업의 의지를 유도하는 일  
관된 정부 정책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5년간 1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동시에 국토를 안전하게 보전해 나간다.

## 5. 한·중·일 문화, 역사, 예술 텔레비전 방송 위원회 출범 (EABS-T.V)

1986년 2월,  
독일과 프랑스의 데탕트 원칙 아래 출범한  
유럽의 T.V 'arte'는 반목과 대립의 양국 관  
계를 청산하는 데 획기적 기여

한자 문화권인 한·중·일 3국의 현재와 미래  
의 커뮤니티를 한국이 선도한다.



## 한·중·일

### 동북아시아 문화, 역사, 예술 텔레비전 방송위원회 출범(EABS-T.V)

한, 중, 일 3국이 공동출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ABS-T.V 출범제안 (2008년 3.1절 차기 대통령 기념식사에서)

2차 대전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테탕트 원칙아래 출범한 유럽의 T.V arte를 철저히 연구한다. 한, 중, 일, 3국의 상호 역사, 문화, 예술 언어의 동시간대적인 경험과 이해를 통해 공감대를 기초로 동북 아시아의 공존, 공영을 꾀한다.

차기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일례로 김대중 전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수상과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한, 일 경제행사를 한 경험의 사례가 있듯이, 우리가 먼저 미래를 위하여 보다 과감한 이니셔티브를 행한다.

2008년 제안, 3년간 한, 중, 일 3국의 협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1년 1월 방송개시를 목표로 한다.

참고) 유럽 문화채널 「ARTE」

설립배경 및 경과

ARTE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콜 수상이 유럽연합의 정신을 실천하는 2개 국어로 방영되는 문화방송의 실현을 목적으로 공동추진한 사업으로 문화, 교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송하는 유럽문화채널 방송

설립취지 및 배경

이웃 국가이면서도 전쟁과 반목이 끊이지 않았던 역사를 불식시키고, 유럽연합의 쌍두마차인 두 나라간의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시각을 접합시킴으로써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를 넘어 방송에 의한 진정한 유럽통합을 추구

설립경과

1986년 2월 프랑스 텔레비전 방송사인 La SEPT 설립(파리)

1988년 3월 독일(당시 서독)의 프랑스 국경 인접지역의 3개 자치주 책임자들이 불-독 문화채널 설립을 위한 조직을 출범

1988년 11월 불-독 정부간 합작 문화채널의 소재지 합의(스트라스부르)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콜 수상은 합작 문화채널을 지원한다는 공동선언 발표

1990년 10월 프랑스 정부와 독일 11개주 사이에 국가간 조약을 맺어 유럽 문화채널 설립의 골격을 갖추

1991년 3~4월 불-독 양국의 ARTE 책임방송사 및 예산배분 확정

1992년 5월 30일 첫 방송 실시

## ARTE -

## 일반적 사항

- 광고방송이 없으며, 예산, 인원, 프로그램 공히 양국이 1/2씩 부담
  - ※ 예산지원은, 프랑스는 정부보조금으로 독일은 수신료로 충당
- 프로그램은 양국이 분담하여 제작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양국 언어로 방송
- 주로 교양 프로그램 위주의 문화채널로서 야간에만 방송
- 독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대상으로 방송

## 방송 프로그램의 구성

- 고급 문화예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영화를 주로 편성하여 방영
  - ※ 쇼, 게임 등 오락 프로그램은 없음
- 테마특집(주 3회, 연 156개 테마)과 다큐멘터리(약 30%, 연 600편) 프로그램은 ARTE 방송의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전 유럽 차원에서 제작

## 「ARTE」의 구성 및 운영

- 본부 : EC 법제에 따라 설립된 특수한 유럽법인으로서, 기본방침 책정, 최종결정, 불,독 간의 조정, 프로그램 송출을 담당
- 하부기관 :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프랑스 - La SEPT, 독일 - 독일 ARTE)

## 프로그램의 제작

- 기본 편집방향에 따라 프랑스 독일의 각 제작국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매월 1회 본부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채택
  - ※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 8명(본부 4, La SEPT 2, 독일 ARTE 2)
- 위원회에서 채택한 프로그램을 프랑스와 독일의 제작국이 제작

## 양국 시청자의 방송 수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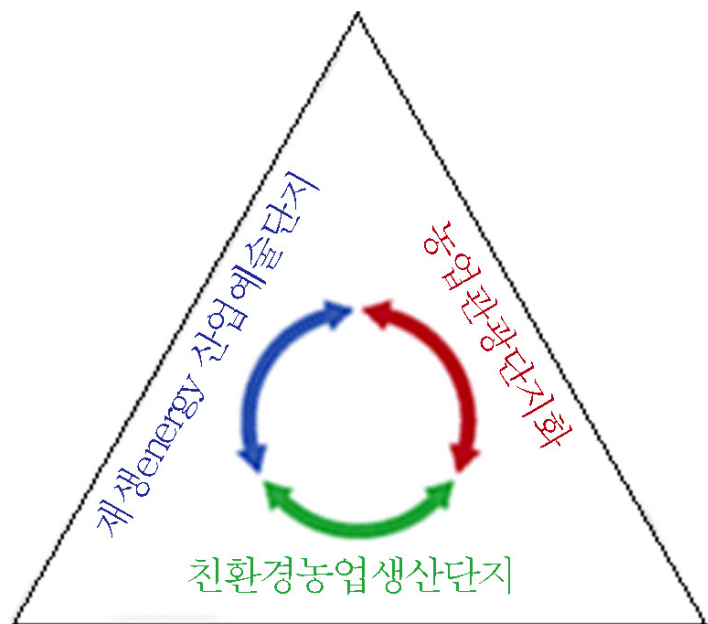
- 독일 : 케이블 수신, 위성방송(독일 코페르니쿠스, 프랑스 TDF 1?2)
  - (케이블 1,1,40만 세대, 위성수신 40만 세대)
- 프랑스 : 케이블 수신, 지상파 방송(케이블 100만 세대, 지상파 2,000만 세대)

## 「ARTE」 방송의 성과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는 프로그램 편성으로 독일 프랑스 나아가 전유럽의 다큐멘터리 영화(독립영화 포함), 음악, 연극, 무용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불, 독의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 화면을 통한 양국민 만남의 장이 되었으며, 방송사 내부에서도 양국 직원들이 서로 다른 업무방식을 존중하는 긍정적 효과 거양 ARTE가 제작에 참여한 많은 프로그램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며, 보다 많은 사람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화를 전달함으로써 대중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성공했다는 평가



## 6. VISION 새만금



3개의 축 (築)과 파노라마

재생 energy 산업예술단지  
농업관광단지화  
친환경농업생산단지

### 현실 인식-

새만금 간척사업, 과연 해법은 없는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에 40,100ha에 달하는 토지와 담수호, 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이는 여의도의 140배 넓이로 계획

1991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생태문제는 크게 거론되지 않았음

그러나 1996년 시화호의 오염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새만금의 담수호 역시 오염될 것으로 진단

생태의 보고인 갯벌을 없애고 그곳에다 농지를 만든다는 것은 생태파괴이며 경제적 실효성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공사 중단과 계속

전반적인 분위기가 새만금 사업 중단으로 연결되자 전북지역 주민들이 반발

이명박씨의 경우 전북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콘크리트 덩어리-두바이 관광 단지-를 만들어 호텔, 골프장, 상업단지 등을 짓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의 물길은 즉시 열어야 한다.**

## 현실대안, 3개의 축-1. 거대 재생에너지 예술단지 개발

### 새만금 대단위 규모의 '풍력발전소'

에너지 원료의 해외의존도 97.4%, 에너지는 수입품  
국가 전략 차원에서 풍력발전소 건설  
풍력발전은 재생가능 에너지인 바람에 의해 단순히 전력만을 생산하는가?  
전력 생산 이외의 전망은 없는가?  
아니다. 인력을 창출한다.

원자력발전은 첨단기술, 그러나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음  
풍력발전은 원자력에 비해 단순한 기술, 풍력발전은 일자리를 창출  
한국은 반도국가, 3면이 바다, 풍력발전의 적요지(摘要地)

**한국은 풍력발전의 가능성이 크다.**  
**바닷가에 많은 풍력발전소를 건설 가능**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독일의 풍력발전에 대한 급격한 관심증가와 이에 따른 풍력발전시설의 건설로  
에너지혁신과 고용창출경험은 한국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사례의 경우

풍력발전소는 근해에 대규모 단지로 설립되는 추세  
현재 독일은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분야에 17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관련기업의 매출은 170억 유로를 차지한다.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는 현재 2기의 풍력발전소가 건설돼 있다.  
STX가 완공시킨 새만금풍력발전기 1, 2호기는 7백50kW급이다.  
이는 전북도청이 2010년까지 7백50억 원을 들여 총 50기를 설치하는  
'새만금 지구 풍력발전설비 설치 공사'의 첫 성과로 시험운전을 실시한 결과  
한국전력에 1천5백만원어치의 전력을 판매해 향후 48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50기 정도의 규모로는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  
그리고 현재 풍력발전소는 새만금 방조제 이용과는 전혀 무관.

### 새만금 대단위 '태양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 새만금에 대규모로 건설  
kWh당 발전원가는 약 30센트(약 390원/kWh) 미만  
그러나 태양전지의 안정성은 상당히 높아서 고장 등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  
이 거의 없으며  
수명이 길고(20년 이상) 경년열화(시간이 지나면서 재질의 기계적 성질이 약화되는  
현상)도 적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신규보급,  
이는 연간 40억달러의 매출액에 해당하며, 연평균 30% 이상의 보급시장 신장  
이 기대되고 있다.



스페인의 아벤고아(Abengoa)사는 최근 타워를 이용한 상업용 태양력 발전소 'PS10'을 스페인의 남부도시 산루카르 라 마요르에 건립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체 에너지 보고서에 실린 이미지

새만금 재생 에너지 단지는 현대 미술의 안목으로 관광수요를 충족한다.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 건설 중인 태양력 발전소는 완성되기 이전인데도 매년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고 있는 현상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일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배제하고 생태 건축 등 최첨단의 현대 건축으로 인공적 관개 시설은 최소화 한다.

### 3개의 축-2. 새만금, 친환경 농업생산단지화

고품질 농업,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선택과 집중)  
건강에 안전성 보장(친환경농업)

#### 수출농업 장점

농산물 성장에 적합한 기후 풍토  
생산농민의 근면함  
새로움에 대한 열정  
세계적 수준의 비닐하우스 농법  
시설 농자재 발달  
규모화 농업이 가능  
농산물 상품 차별화  
세계최대 수입시장 일본 인접

#### 새만금, 아시아 최대 화훼 단지 조성

일본 시장, 중국, 홍콩시장 겨냥  
화훼류 총수출액은 2002년 기준 3,200만 달러  
그러나 농산물 중에서 가장 큰 수출신장세  
1999년 이후 국화와 장미 일본 수출 증가

#### 새만금 농업단지 개발 이후 수출 전략

수동적, 생산하는 것 수출하는 방식 → 공격적,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수급조절형 → 수익창출형 및 시장 개척형  
백화점식 불특정 소비자 공략 → 전략품목 개발, 틈새시장 공략  
직접 보조를 통한 인위적 경쟁력 강화 → 간접적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간헐적 미봉적인 정책 →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정책



미국, 온타리오의 화훼단지



### 3개의 축-3. 새만금, 국제적 자연친화관광단지로

자연관광은 현실적인 대안  
과거 연장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전개

주 5일제 근무제 정착  
관광 휴양공간으로 자연친화적 관광단지로  
도시민들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려는 욕구 증대

#### 농촌 어메니티(amenity)의 중요성이 증대

어메니티는 환경보존, 종합쾌적성, 청결, 친절, 인격성, 좋은 인간관계, 공생 등  
내포하는 뜻이 다양함

국내관광 총인원 2002년 연 인원 4억 명  
이 중에서 농촌자연 관광이 급격하게 증대 2억 명

1980년 이후 관광자원개발로  
자연농원, 관광농원, 민박마을, 주말농장, 자연휴양림 등 증가  
농촌 어메니티의 발전 가능성 확실히  
한국 최대의 자연친화관광단지

토지와 인력에 의존하는 농업이 아닌, 기술과 자연 농업문화가 결합되는 대단지

#### 생산위주만의 농업으로부터 서비스가 부가된 자연농업 관광정책으로 전환

농촌이 지닌 자연환경, 역사문화 환경, 대규모 재생 에너지 예술단지의 복합문화화,  
바다경관,  
염전문화 개발,

유럽연합(E.U)에서는 1991년부터 농촌지역 개발 프로그램인 리더(LEADER)  
라는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를 다양화 활성화  
영국에서는 농가 민박의 경쟁력 강화, 경관화, 환경보전, 농지산책길 조성,  
농업경영다각화사업, 농장관광활성화사업  
독일에서는 '농가에서 휴가를' 사업을 중심으로 농가의 농외소득을 향상시켜  
이농을 방지, 농촌관광을 추진  
일본에서는 1994년부터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농촌자연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새만금 현장 2004

참고 및 인용

Caves, Richard E. 2000. *Creative Industries: Contacts III between Art and Commer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oupe, Michael. 2001. "The Built Environment" *The UK Cultural Sector: Profile and Policy Issues*, edited by Sara Selwood.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Creigh-Tytle, Stephen and Gareth Stiven. 2001. "Why Does Government Fund the Cultural Sector?"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 2004 문화관광부

Germany Agenda 2010 - 2004 Press and Information Office of the Federal Government

요하네스버그 비망록 한 연합한 행성에서의 공평성 2002 - 하인리히 뵐 재단(녹색평론)

고품질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 - 2003 삼성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완배

농촌 어메니티(amenity)의 국외정책 사례 - 2003 삼성경제연구소 한양대학교 김남조

개발과 환경의 평행선/글 energydaily 정법중 기자 - 2003년 06월 09일  
청년환경센터 korea eco - center Homepage

새민금의 수질보호 대책 - 2005 전북대 토목환경공학부 김환기

오마이뉴스 '운하는 가라' - 2007년 04월 24일 박진섭 생태지평 연구소

대안에너지 정책으로/글 - 풀뿌리시민단체 에너지전환 윤정은 기자 2005년 10월 04일

고유가와 대체에너지/글 ABB in KOREA 김유진 2006년 09월 21일

에너지관리공단 [보도자료]공공기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에 따른 수요조사 실시  
2004년 01월 08일 홍보 2팀 작성

에너지 전환 - 매거진 에너지비전 박진희 동국대학교 2007년 05월 29일

사회 문화 비평집'착한사람들의 분노' 2000 (생각의 나무) 김상수

<식물의 열매를 실(實)이라고 한다> 21세기 국가 구상을 위한 단서 2005 (Jinhan M&B)  
김상수  
www.kimsangsoo.com visual dialy 글 중에서 □